

<보도 자료>

『데이터를 다루는 한국의 방식: 지구촌에서 가장
네트워크화된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하는 제3의 방안』

에브 페이근바움 및 마이클 넬슨 공편

카네기 국제평화 연구소 보고서

2021. 8

다방면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중갈등과 치열한 전략적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둘러싼 기존의 모델들을 넘어서서 제3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독특한 기술 거버넌스와 규제체제를 구축해왔고 공익과 사익, 그리고 국가와 시장간의 간격을 균형적으로 유지해온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를 다루는 한국의 방식』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더 폭넓은 공유를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한국은 ICT강국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보다 많은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신뢰성이 높은 온라인 인증 시스템의 제도화,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선제적 방어체계 수립, 그리고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데이터 규제체제 구축 등 많은 도전들을 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보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Sending Party Network Pays (SPNP)”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국제경쟁력과 ICT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간 기술 경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제3의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각각 강조하고 있는 규범, 기준, 그리고 규칙등을 준수하길 희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은 확산되고 있는 기술적 도전들을 상업적 측면은 물론, 지정학적 각도에서도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을 상호견제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라이벌 국가와의 보다 밀접한 기술적 연계를 적극적으로 억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의 장점을 반영한 차세대 기술 거버넌스와 규제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한국의 경험과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성공과 실패사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데이터와 정보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했다.

제1장 “신온라인에서 신뢰 구현을 위한 기술: 온라인 인증과 데이터 접근성” (고려대학교 장규현·임종인)은 지난 20년동안 이어온 사이버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인증시스템의 진화를 분석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친 후 한국은 구성원들이 최대한으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데에 주력해왔으나 다가오는 전례 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생태계 환경 속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수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의와 협력 체제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사이버안보와 데이터 레질리언스에 대한 한국정책” (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소정·배선하)은 한국정부가 구축해온 사이버안보정책, 관리체계, 그리고 데이터 보호 등의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위해 한국정부는 2019년에 포괄적인 국가사이버전략을 수립했으나 전자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정부의 경우 더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취약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으로 사이버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보안과 안전적 데이터 공유를 위한 관리체계와 보조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3장 “데이터 로컬리제이션과 한국형 접근성” (고려대학교 박노형)은 데이터 보호와 로컬리제이션, 특히 관련된 법률과 조약, 그리고 집행부서와 국회와의 협의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을 포함 한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등의 공통적인 문제는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 규범, 그리고 가이드라인 등을 보다 조화롭고 신뢰성이 높은 통일된 데이터 이동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현재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인 데이터 보호 법률 체계를 구축해온 만큼 PIPA 수정조항 등의 조치들이 도입될 경우, 한국은 다국간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리더로서 데이터 로컬리제이션을 포함 한 디지털 무역의 새로운 체계를 설계 하는 데에 있어서 일조할 수 있다는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상호접속용 모델에 대한 한국의 도전” 후기 (고려대학교 박경신·카너게 연구소 마이클 넬슨)에서는 바람직한 장기적인 네트워크 강국으로서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형 데이터 보호와 관리 체계가 진정한 제3의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보다 개방적인 네트워크 정책이 필수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경우, 한국과 외국기업,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이러한 노력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더욱더 절실히 필요할 것이며 한국의 노력이 기대된다점을 지적하고 있다.